

<서평>

## 아세안은 “왜” 중요한가?

마티 나탈레가와, 최기원 옮김, 『아세안은 중요한가?』,  
과주: 문학사상, 2019.

강 유 민\*

2007년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래로, 상당수의 또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란에 ‘외교관’이 새겨져 있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21세기 들어 한국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각종 교과서에서는 약소국을 벗어나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세계 각지에서 눈부신 활약을 거두는 한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학생들에게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마티 나탈레가와(Marty Natalegawa)의 『아세안은 중요한가?(Does ASEAN Matter?)』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가 그간 인식해 온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아세안의 틀에 담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저자 나탈레가와는 1986년 인도네시아 외교부에 입부하여 주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하였고 국제기구 과장, 주 영국대사, 아세안 협력국장, 유엔 인도네시아 상주 대표,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유엔 외교와 인도네시아 다자외교 정책, 아세안 외교를 두루 경험한 다자외교 전문가이다. 현

---

\*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yums1114@gmail.com.

직자들의 경험이 담긴 이러한 저작들은 지역연구나 국제정치 전문가를 목표로 학업에 정진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가 여태껏 알지 못했던 아세안의 독특한 운영 방식과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외교에 대해서도 다양한 새로운 사실들을 깨우쳐 줄 것이라 믿는다.

나탈레가와 장관은 자신의 다채로운 외교성과의 주요 무대로 아세안을 지목한다. 창설 당시인 1967년부터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 곳은 바로 아세안이었다. 그리고 지역질서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그 중심에 있는 동남아시아는 지난 50년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특히 세계화의 물결로 국내문제와 국외문제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탈냉전 이후 식량, 환경, 보건, 에너지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떠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통적인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의 틀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국제정치이론과 견해들이 강대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등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단순 비교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미국에선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등장하며 혼돈의 나날을 보내는 반면에 투명성과 민관협력, 열린 소통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방역 수준은 각국에 모범사례로 손꼽히며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국익 앞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헨리 존 템플(Henry John Temple)과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명언<sup>1)</sup>을 응용하자면 비전통적 안보 위협 앞에서는 영원한 강대국도, 영원한 약소국도 없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여실히

---

1)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H. J. Temple), “America has no permanent friends or enemies, only interests.” (H. Kissinger).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아마도 이러한 경향을 강조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세안이 창설될 당시인 50여 년 전과 현재의 국제정세를 구분해주는 주요 특징으로 ‘연계성’과 ‘힘’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외교의 본질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기존 외교의 거푸집에서 벗어난 다자외교의 장이 더 넓게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 1. 50년 전과 지금 - 분쟁에서 평화로. 아세안의 창설과 전략적 신뢰의 형성

50여 년 전의 동남아는 끝없는 분쟁, 빈곤, 불안정, 저개발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의 동남아는 짧은 세월 안에 장기간의 평화(long peace)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책에서는 50년 만에 신뢰의 결핍 상태에서 전략적 신뢰 관계로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요인으로 경제적 성장과 초기 역학구도의 긍정적 변화 노력을 꼽는다. 당시의 동남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배 체제와 냉전 체제를 거치며 경쟁적 역학구도가 혁파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냉전 시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 대립구도의 축소판이었던 이 지역에서 서로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조약과 기구가 설립되었음에도 냉전 체제 자체의 분쟁요소들이 이들의 근본적 활동을 제약하면서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역내 자유진영 국가들의 주도하에 역내 협력 구축과 포용적 태도라는 다른 접근법으로 탄생한 아세안이 부정적 역학구도 타파를 위하여 선구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고 비(非)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그 노력이 빛을 발하여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촉즉발의 정세 속에서 다양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내 상황을 포용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평지는 규범과 회원국의 의지에서 그 역량이 보였다고 생각한다. 책에서는 아세안 협력선언(Declaration of ASEAN Concord)과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을 주요 규범으로 지목한다. 당시 분쟁으로 얼룩졌던 동남아 지역에서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맺어진 TAC는 이후 비아세안 국가였던 브루나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가 합류하여 역내 전역을 포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조약의 입지가 아세안 외부까지 확대되어 기존 경쟁적 질서의 과감한 변화를 야기했다. 여기에는 TAC를 아세안의 가입조건으로 하는 독특한 속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면서, 특히 역내의 영토분쟁들에 대해 직접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회원국들에게 간접적인 견제 효과를 주었다. 평자에게는 TAC 인준국 간 무력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아세안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아세안과 연관된 국가에도 간접적으로 해당되게끔 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가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는 비전이 보이는 부분이었다.

또한 아세안 주요국,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진영을 넘어 비아세안 국가들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신뢰 형성을 더욱 순조롭게 해주었다. 특히 베트남의 괴뢰정부인 캄푸치아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대신 민주캄푸치아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아세안 차원에서 별인 공동외교 활동과 비공식회의(JIM, Jakarta Informal Meetings)는 비공식성, 분쟁 당사자 사이와 역내 국가들 사이의 이차원적 접근법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여 복잡한 역학구도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

다. 이러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세안은 역내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제공했으며, 이로써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이 아세안에 가입하게 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저자는 역내 최대국인 인도네시아의 변화가 동남아시아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역내의 역학구도의 변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책임과 관여, 리더십을 언급한다. 평자는 저자의 주장과 해석을 통해 ‘내정불간섭’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아세안 정신이 최근 들어 원칙보다는 가족적 유대관계(familyship)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세안 회원국의 이익과 역내 공통적 이익 간의 평형을 꾸준히 유지하며 분쟁을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 아세안이라는 확대된 ‘가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이 “아세안 방식(ASEAN Way)”의 관행과 제도,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아세안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직접 관여하여 TAC 정신을 관철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던 2011년 캄보디아와 태국 간 브레아 비헤아르 사원(Preah Vihear Temple)에서의 영토분쟁의 해결과정이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APEC 의장국 순번과 중복 우려가 있어 관례와 달리 2011년에 의장국이 된 상황이었으며, 양국의 국경에 걸쳐 있는 사원을 차지하기 위한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분쟁 종식을 위해 이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여 다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인 반면 태국은 철저히 양자적 문제로 국한하고자 하였는데, 그에 반해 아세안에는 공통된 입장이 없었고 권한상 권고만 할 수 있는 상태라 중재의 효과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저자는 의장국의 의무장관으로서 이 분쟁에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생각

으로 프놈펜과 방콕 사이에서의 셔틀외교(shuttle diplomacy)에 집중하여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고, 양자 해결과 안보리 사이에 선호되는 절충지점인 아세안 차원에서의 중재를 제안했다. 셔틀외교를 통해 아세안의 직접 개입이라는 외교적 창구를 열어줌과 동시에 아세안의 ‘안전 벨트’ 역할을 위한 대응, 그리고 아세안의 “각본”에 대한 안보리의 지지를 받아 사안이 아세안의 통제권 밖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양국은 양자 협상 장려, 평화적 수단 사용, 정전 상태의 유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결정하였고, 양국 또한 의장국의 개입을 존중해주어 수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거쳐 해결책에 합의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아세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역내 협력의 유지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2011년 2월 5~6일(토요일과 일요일)에 나는 양측과 전화 통화를 했고, 양측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양측은 서로 최근 사태의 원인을 상대측의 책임으로 전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침예한 입장차를 지켜보며 침묵을 지키는 중간자가 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양측의 견해와 인식을 숙지하여 사태를 즉시 안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시점, 나는 2011년 2월 7~8일 양 정부를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최대한 접점을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현 상황을 안정화하고 외교와 대화를 중요한 해결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설득한다는 취지를 피력하고자 했다(59-60).

이와 같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회원국 간의 신뢰를 쌓는 일련의 과정은 어느새 아세안의 전통이 되었다. 국가들 또한 회의나 조약, 협정 등과 같은 공식적인 만남보다는 비공식적이고 격의 없는 대화를 선호하며 때때로 더 나은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평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 전략적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잘 알기에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특히 합의 사항을 이행할 때 투 스피드(two-speed) 방식을 적용하여 CLMV 국가들을 배려해 먼저 적용 기간을 부여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던지, 만장일치가 원칙인 아세안에서 “숙의와 합의(musyawarah mufakat)” 정신을 살리고 각국의 이해를 절충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기권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 한해 순차적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ASEAN-X” 방식을 사용하는 등의 양보를 보여주는 이러한 특수성이 아세안으로 하여금 합일체(union) 보다는 결사체(association)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한다. 유럽연합(EU)과 같은 합일체적 연합은 단일한 이해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아세안은 각자의 이해를 인정하고 이를 절충하여 ‘공동체(community)’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는 이러한 기반 아래서 태어난 것이며, 동남아커뮤니티가 아닌 아세안커뮤니티인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것으로 여겨진다.

## II. 인도 태평양 시대의 아세안 중심성

베트남전의 종전과 민주캄보디아의 국제적 인정이 아세안의 대외 관계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고, 아세안은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지위부여를 통해 연계되는 ‘ASEAN+*a*’ 프로세스를 형성시켰다. 특히 아세안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의 창설과 한·중·일과의 ASEAN+3 프로세스의 발족은 아세안이 동북아시아까지 포괄해 안보문제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고, 서로 예민한 관계에 있는 3국이 하나의 장 안에서 협조하게끔 하여 아세안이 역내구도의 설계자로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 평자는 아세안의 이러한 확장에는 아세안 회의 프로세스의 의제 설정 역량이 중요했다고 본다. 아세안의 자체적 의사 설정 역량의 기본은 아세안 회의를 가장 우선하는 데에 있다. 아세안 회의를 먼저 시행한 뒤 역외 국가로 확대하는 프로세스는 아세안이 의제를 선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블록의 확장을 통한 조약의 확대 역량, 그리고 규범(norm)의 형성과 확산을 향한 아세안 각국의 의지가 아세안 중심성을 다른 국가들이 따르게끔 하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아세안 내에서 단일한 강국이 없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아세안 중심성을 근거로 한 아세안의 확장은 범아시아 협력 증진을 위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로 발전하였다. 책에서는 동북아, 인도양, 남태평양 인근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의 관점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적 평형은 국제정치이론에서의 ‘세력 균형’과는 다른 개념으로, 정적이고 변화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국가의 힘을 수치화하는 강대국 위주의 세력균형과 달리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안별로 다르고 협상능력과 같이 수치화될 수 없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동적 평형은 어떠한 경우에 유리할까? 이 개념은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역학을 고려하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에서 큰 빛을 발할 수 있고, 약소국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어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적인 국제관계에서보다 더욱 규범과 원칙에 근거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바로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아세안과 대화상대국일 것, TAC에 합의할 것, 그리고 아세안과 실질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회원자격으로 두어 자연스레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와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아세안·아세안+3·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안에서 아세안 중심성 또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향후 중국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에 중국을 아세안 중심성의 경계 안에 포함시키고, 동적 평형으로 강대국의 영향력을 희석하고자 했다. 참여국 간의 관계에 규범과 원칙을 적용하여 분쟁에 대해 무력보다는 외교와 대화 등의 평화적 수단이 선호되게끔 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끌어들이 수 있는 방편인 것이다.

추가적으로 저자는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아세안공동체의 글로벌화 추진 작업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이니셔티브를 강조한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글로벌 국가 공동체 속의 아세안공동체’ 프로세스를 실행하며 역내외 자연재해나 보호책임(R2P) 등의 국제문제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평자는 그 중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행동 변화과정에서의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하고 싶다. 2008년 미얀마에서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가 몰고 온 재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국제원조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제사회에 대한 의심이 강했던 군부정권은 원조를 거부하였고, 서방세계는 배타적인 군부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2004년 아체 대지진 이후 국제원조의 중요성을 크게 느낀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은 미얀마와 국제사회 간의 신뢰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미얀마에 국제원조를 거부하고 자국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인가, 국제사회에 문호를 완전히 개방할 것인가, 아세안의 참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것인가의 세 가지 옵션을 제안했고, 미얀마는 아세안의 참여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국제원조를 수용하였다. 아체 사태에서의 학습효과와 국제원조의 적절한 통제를 보장한 아세안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로써 아세안 차원의 긴급 대응팀과 아세안 인도주의적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미얀마와 국제사회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나르기스 모델’이 아세안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었을까.

책에서는 나르기스 사태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사례,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아세안의 협력 대응이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세안의 노력으로 회원국(미얀마)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역외 국가의 재해 상황에 아세안 차원에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량이 될 수 있던 것이다.

### Ⅲ. ‘사람 중심의 아세안’의 미래

강조하였듯이 아세안의 통합 의지는 CLMV 국가들의 경제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여 아세안 국가들 간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나 관심을 보일 만한 부분은 최근 아세안의 통합이 빈곤 감축, 경제발전, 인적 자본의 발전 등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people centered)” 접근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는 ‘사람 중심의 접근’이 다양한 사안들에 있어 회원국별로 다른 시한을 정하거나 CLMV 국가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제공하는 부분처럼 취약 계층과 소수를 위한 접근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는 아세안 3대 공동체 중 하나인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에서 강조하는 ‘사람 중심’과 연관성을 보이면서 인적자원(human resource)의 개발을 부각하는 모습, 그리고 인권, 민주주의, 선정을 중시하는 최근 아세안의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져 아세안이 더욱 사람 중심의 기구로 탈바꿈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인권 이슈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지만 미얀마 이슈 이후 내정불간섭과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였다는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증대하였고, 아세안의 보편적 원칙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였던 내정불간

섭 원칙마저도 최근에는 유연하게 적용되며 국가 간 협조를 통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며 나탈레가와 장관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이 된 직후에 효과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던 아세안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내실화를 거론하며 ‘아세안인권선언’ 제정과 다양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암시하였고, 이듬해인 2012년 제 21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인권선언이 공식 발표되었다. 비록 여전히 회원국 사이에 인권 수준은 차이가 존재하고 선언문마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에서 ‘정부 간 인권위원회’를 통한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정부 간 위원회에 시민사회 대표를 보냄으로써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사람 중심’의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아세안공동체가 역내외 안정의 선구자로 떠오른 지금, 평자는 이 책을 통해 아세안의 성공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었다. 첫째로 독특한 상호 신뢰관계에 주목한다. 아세안은 위기 상황마다 회원국 간의 충돌을 완화하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안정의 중재자로서 기능하며 동남아 지역을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의 주체로 바꾸어 놓았다. 비록 여태껏 많은 부침을 겪어왔으나 믿음을 토대로 강인하게 단결하여 장기간의 평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역내 평화를 위해 신뢰를 제공해야 하는 조력자였던 아세안이 이제는 신뢰받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 중심성은 현상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혁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냉전의 산물로 시작하였지만 여타의 국제기구들과 달리 동남아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체제의 힘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변혁적 야심과 선도적인 태도가 작금의 성공을 대변하는 진보

의 결과물이 되었다. 셋째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이끌어 내는 정신을 강조할 수 있다. 개별국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특히 “ASEAN-X”, 투 스피드(two-speed) 방식 등과 같은 독특한 방법을 통해 아세안이 양보와 배려에 기반한 공동체임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 저자는 외무장관으로 재직할 시기 ‘사람 중심의’ 아세안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앞으로 아세안이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아세안의 존립 목적도 이제는 ‘사람 중심’의 아세안을 위한 민주적 원칙을 확립하는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아세안의 혁신이 ‘사람 중심’의 방향성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역내 강국의 적극적인 태도는 아세안이 복원력을 잃지 않을 동인을 꾸준히 제공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인도네시아 전 외무장관의 관점에서 쓰인 탓인지 아세안 자체의 독창성과 혁신성보다는 저자의 개별적 경험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아세안의 발전을 위한 개별국의 역할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좋은 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인도네시아의 성과와 위치가 크게 부각된 까닭에 다른 역내 국가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을 동시에 전해준다. 개별국의 사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아세안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다른 국가의 주요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드러내 주었다면 “아세안이 중요한가?”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졌을 것이다.

단순히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의 증진을 넘어, 전통적 기준을 극복하고 사안별로 시의적절한 다자외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요즘이다. 아세안은 왜 중요한가? 그 물음에 대한 진실한 답은 역내 평화와 안정의 기여 측면에서의 아세안의 방향성과 ‘사람 중심’의 아세안을 위한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미래세대이자 연구자로서

우리들이 ‘사람 중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연결고리로 삼을지에 대해 아세안의 지난 50년은 복잡하지만 좋은 본보기를 제시한다.

